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2. 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·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 수정(안 제8조)

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수정

나.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개설계획 예고

-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(안 제13조)
-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자, 개설지역, 영업개시예정일 등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(안 제13조의2)

다.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강화(안 제13조의3)

-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,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
-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,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(단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할 수 있음)

3. 근거법규

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, 제8조, 제12조의2, 제13조의4 및 제52조

나.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제5조의2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

1) 검토의견 :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

위원회 위촉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권고 함.

2) 반영결과 : 미반영(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협의회 특성상 협의회 구성에 대해 성별 비율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, 위원회 구성 시 내부 방침을 정해 성별 균형이 최대한 유지하도록 구성하겠음)

다. 입법예고 : 2013. 10. 31. ~ 2013. 11. 20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등에 관한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2조제3호의2”를 “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총체적”을 “전체적”으로, “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”을 “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목 중 “구성·운영”을 “구성 등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1항 중 “중소유통 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”을 “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”으로, “구성한다.”를 “둔다.”로 하고, 같은조제2항 중 “회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15명”을 “9명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
2. 관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기업의 대표 2명
3.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4.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5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6.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1.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업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 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 중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)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같다)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(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)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제5항 중 “제한할 수 있다.”를 “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조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개설 및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

제13조의2를 다음과 한다.

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)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개설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
2. 개설지역(주소)
3. 영업개시예정일
4. 대규모점포등의 종류

5. 매장면적(m²)

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3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

1.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
2.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영업정지)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
2.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. 이 경우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

위반과 같은조같은항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.

3.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1. 제13조의3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다.

③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—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준대규모점포”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.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—— 제2조제4호 ——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조(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 전체적 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 ——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·운영)</p> <p>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한다.</p>	<p>제8조(—— 구성 등)</p> <p>① ——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——</p> <p>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협의회는 <u>회장</u>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<u>협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/u>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</p> <p>가.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</p> <p>나. 관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</p> <p>다.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</p> <p>라. 상공회의소 관계자</p> <p>마.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</p> <p>바. 구 의원</p> <p>사.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아. 그 밖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p> <p>2.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공무원</p> <p>④ <u>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협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, 구청장은 협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</u></p>	<p>② _____ 위원장 _____ 9명 _____</p> <p>③ <u>협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.</u></p> <p>1.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</p> <p>2. 관내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</p> <p>3.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</p> <p>4.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5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6.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</u>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협의회회의 업무)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. 대형유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진열, 위생관리, 마케팅,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,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.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. 대·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.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,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.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<p>제9조(협의회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령지 않다.</p> <p>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.</p> <p>④ 협의회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
현행	개정안
<p>8.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</p> <p>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·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등록) 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 등”이라 한다)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)을 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(이하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상생협력사업계획서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.) 	<p>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</p> <p>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업간의 상생협력 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제13조(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)</p> <p>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(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

현행	개정안
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 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 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실태조사 : 평일,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 한 최근 1개월간의 매출액 자료를 대 규 모점포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매출액 을 조 사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규모 점포 등이 매 출액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, 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대규모 점포등의 대표에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 임은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에게 있음을 통지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 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 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(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)내에 그 사유 를 명시 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_____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개설 및 변경등록(점포의 소재지를 변경 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하려는 대규 모 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</p> <p>제13조의2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)</p> <p>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1. 개설자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자 성명)</p> <p>2. 개설지역(주소)</p> <p>3. 영업개시예정일</p> <p>4. 대규모점포등의 종류</p> <p>5. 매장면적(㎡)</p>

현행	개정안
<p>2. 의견청취 :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의 대상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의3(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,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.</p> <p>1.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2.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한다.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영업정지) 구청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기간에营业을 한 자 2.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营业을 한 자. 이 경우 제13조의3제1항 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조같은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. 3.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营业을 한 자 <p>제17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3조의3 각 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자 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p>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다.</p> <p>③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42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12. 2.(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12. 6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3. 12. 16.(월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경제국장)

가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·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인원 수정(안 제8조)
 -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9명으로 수정
-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및 개설계획 예고
 -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(안 제13조)
 -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자, 개설지역, 영업개시예정일 등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(안 제13조의2)

-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강화(안 제13조의3)
 -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,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
 -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,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(단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 할 수 있음)

4. 근거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, 제8조, 제12조의2, 제13조의4 및 제52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 및 제5조의2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석기)

○ 본 조례안은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,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·변경,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등록 변경절차, 영업시간 제한 등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
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